

# 예산 · 재정 정책연구 동향

「2023-제4호(Vol. 27호)」

본 자료는 2023. 8. 14.까지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요약·수록한 자료로,  
‘바로가기’를 누르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자료 출처
1. 경제분야 (p1)	• KDI 경제동향 8월	한국개발연구원
	• 강원도 규제의 경제비용	강원연구원
2. 재정분야 (p2)	• 월간 재정동향 2023년 8월호	기획재정부
	• 재정준칙 도입 논의 동향 및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p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제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법제처
4. 정책 및 연구 (p4~5)	• 주거정책의 분권화, 강원도에서 시작하자	강원연구원
	• 지방소멸 위기, 청년 일자리 전략은	국회입법조사처
	• 특별자치도 지방세 특례 설계시 고려사항	한국지방세연구원
5. 뉴스브리핑 (p6~7)	• 7월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보탬이(e)' 활용해 지방보조금 투명하게 관리	행정안전부
	•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 생활인구 최초 산정	행정안전부
	• 향후 3년간 지역 경제교육을 주도할 17개 시·도 별 지역경제교육센터 모집	기획재정부
	•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 추가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 1. 경제

출처

## ■ KDI 경제동향 8월호

(내용 요약) [바로가기](#)

한국개발연구원

우리 경제는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건설투자와 상품수출의 부진은 완화되면서 2023년 경제 성장률은 기존과 동일한 1.5%로 전망

-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 되는 모습
  - 정부부문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성장세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0.6% (연율: 2.4%) 증가하며 경기 부진이 완화됨.
  - 이러한 경기 부진 완화는 자동차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제조업의 성장세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함.
  - 경기 부진 완화와 함께 고용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한 가운데, 물가상승세가 둔화됨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축소됨.
- 중국경제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에 대한 평가가 개선됨.
  - 중국경제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 유입도 지연되는 등 우리 경제에 대한 중국 리오프닝 (경제활동 재개)의 긍정적 파급은 아직까지 제한적임.
  - 미국과 유로존은 성장세가 확대된 가운데, 물가상승세 둔화로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완화됨.
-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는 KDI 상반기 전망에서와 같이 2023년 상반기에 경기 저점을 형성한 후, 하반기에는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 강원도 규제의 경제비용

(내용 요약) [바로가기](#)

강원연구원

- 경제학에서 규제는 시장 실패를 교정하고 효율성을 회복하기 위해 어느정도 필요한 것으로 그 정당성을 부여한다. 하지만, 이 역시 유인 기반 규제에 한정된 논리이며 토지이용규제와 같은 투입요소기준의 규제는 낮은 효과성, 불필요하게 높은 비용, 혁신 제약, 낮은 형평성의 단점들로 최근 주요국들은 이러한 방식의 규제를 최대한 지양하고 있다.
- 현실적으로 규제는 정치적 결정, 이익집단의 로비, 소비자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교정하고자 하는 시장 실패보다 더 큰 경제적 순수실을 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효율적 시장이라는 가상의 경제적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결정되는 경제적 순수실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소비자, 생산자 모두 무지하거나 혹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 군사, 산림, 환경, 농업에 집중되어 있는 강원도의 주요 규제들은 대부분 양(+의 외부성을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반면 해당 자원에 대한 강원도의 경제적 자율권은 침해하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현재 강원도의 경제는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고 그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 보인다.

## 2. 재정

출처

### ■ 재정동향 8월호

(내용 요약)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8.1조원 감소한 296.2조원이다.

○ 그 중 국세수입은 178.5조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39.7조원 감소하였다. 다만 세정지원 기저효과(△10.2조원\*\*) 고려 시 실질적인 세수감은 29.5조원 수준이다.

\* 소득세 △11.6조원(부동산거래 감소 등), 법인세 △16.8조원(기업실적 악화 등), △부가세 4.5조원 등

\*\* 종합소득세 △2.4조원, 법인세 △1.6조원, 부가가치세 △3.4조원, 기타 △2.8조원

○ 세외수입은 15.4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2조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한은잉여금 감소\*(△3.7조원, 2월), 등에 기인한다.

\* 한은잉여금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23년 예산 대비로는 0.5조원 증가

한은잉여금 정부납입금 추이(조원) : ('22실적) 5.5 ('23예산) 1.3 ('23실적) 1.8

< 2023년 6월기준 국세·세외수입 수입 >

(단위: 조원, %, %p)

	'22년							'23년(잠정)				전년동기 대비			
	추경 (A)	결산 (B)	6월 (C)	6월 (누계D)	진도율		본예산 (G)	6월 (H)	6월 (누계I)	진도율 (J=I/G)	6월 (H-C)	누계 (I-D)	진도율		
					추경 (E=D/A)	결산 (F=D/B)							예산 (J-E)	결산 (J-F)	
□ 총수입	609.1	617.8	40.7	334.4	54.9	54.1	625.7	39.6	296.2	47.3	△1.1	△38.1	△7.6	△6.8	
◇ 국세수입	396.6	395.9	21.7	218.3	55.0	55.1	400.5	18.4	178.5	44.6	△3.3	△39.7	△10.4	△10.5	
◇ 세외수입	28.3	30.8	2.0	18.6	65.7	60.5	25.0	2.6	15.4	61.7	0.5	△3.2	△4.0	1.2	
◇ 기금수입	184.1	190.8	16.9	97.4	52.9	51.0	200.3	18.6	102.2	51.0	1.7	4.8	△1.9	△0.0	
(사보기금*)	104.8	119.0	10.0	60.2	57.4	50.6	114.6	12.0	64.2	56.0	2.0	4.0	△1.4	5.4	
◇ 세입세출 외	-	0.3	0.1	0.1	-	36.8	-	0.1	0.1	-	△0.0	△0.0	-	-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 재정준칙 도입 논의 동향 및 쟁점

(내용 요약) [바로가기](#)

국회입법조사처

- 현재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 중인데, 재정준칙의 도입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경직된 재정운용에 따라 재정의 경제안정화 기능을 약화시킬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세계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재정준칙을 도입한 이후에도 재정준칙을 지속적으로 정교화하는 동시에 예외조항 발동 및 후속 관리방안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용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개정 '23.8.8. 시행 '23.8.1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로가기](#)

법제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406호, 2023. 5. 16. 공포, 8. 17. 시행)됨에 따라,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의 선지급 항목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구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정보·재난안전데이터·안전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를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개정 '23.7.11. 시행 '23.7.1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로가기](#)

법제처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중 무공수훈자와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은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지정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약제비용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 대상인 진료비용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무공수훈자 등이 지정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약제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보험에 관한 자료를 국가보훈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시행 '23.7.2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로가기](#)

법제처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하여 생활안정지원의 지원항목에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복구자금 용자, 취득세 면제 등의 간접지원 등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4. 정책 및 연구

출처

### ■ 주거정책의 분권화, 강원도에서 시작하자

(내용 요약) [바로가기](#)

강원연구원

-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양적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 주도로 주거정책 계획수립과 집행체계를 설정하였다. 2015년 6월에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주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주거여건 개선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로 인해 주거의 양적·질적 수준이 개선되었고 어느 정도 주거정책 성과가 가시화되었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의 주거정책 수립으로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구조였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거정책은 중앙정부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지방정부는 단순히 중앙정부에서 기획된 정책에서의 사업 추진과 그 재원을 집행하는 역할만을 담당해왔다. 이와 같은 주거정책 추진으로, 지역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전국에 일률적으로 주거정책이 시행되었다. 중앙정부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중심의 주거문제 해결하기에 급급하였다. 수도권의 주거안정화에 중점을 둔 중앙정보의 주거정책이 추진되었고, 수도권과 다른 여건을 가지고 있는 비수도권의 지역에 적용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거정책은 지방자치 사무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분야와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에는 주거분야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토대로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주거권 실현과 지역특성에 맞는 주거정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 지방소멸 위기, 청년 일자리 전략은?

(내용 요약) [바로가기](#)

국회입법조사처

- 전국 수준의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2016년을 기점으로 1.0미만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급격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청년 일자리 전략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 수도권 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별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의 격차를 인식하고 청년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면서, 청년층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며 생활하더라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을 정책 목표를 설정한 상태에서 청년 일자리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구체적으로는 지역발전, 청년유입, 양질의 일자리가 서로 플러스(+)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의 산업육성, 기술의 활용, 교육훈련 체계, 기업의 조직문화, 지역 주체 간의 협력 등에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 4. 정책 및 연구

출처

### ■ 특별자치도 지방세 특례 설계시 고려사항

(내용요약) [바로가기](#)

한국지방세연구원

- 2023년 7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되었고,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될 예정임
  -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비전이나 강원특별자치도에 요구되는 특별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음
  - 이 법은 2023년 6월 7일 전부개정되어「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 예정임
  - 구체적으로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및 운영, 농업·식품산업·임업 등의 진흥에 대한 다양한 특례를 규정하고,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국가의 임의적 재정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속성이 담보되는 재정특례, 특히 그중에서도 지방세 특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 특별자치도는 개별법이 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독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개별법에서 특례로써 규정된 범위 내에서 그 법이 보장하는 특수한 지위를 향유하게 되므로, 특별자치도 지방세 특례는 특별자치도의 특수한 지위가 구체화되는 것으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됨
  - 특별자치도가 새로이 설치되는 경우라도 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안정적 자원 확보에 대한 과제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며, 안정적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부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 특례 확대는 신중하여야 할 것임
  - 특별자치도는 지역에 대한 세심한 고려와 지역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은 지양하고 반드시 특례 도입을 원인으로 하여 당해 지역에 예상되는 실질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요구됨
  - 도 조례의 내용을 통해 최종적으로 지방세 특례가 확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례로 설계되는 내용(규정)의 지역적 차등적용과 다른 법률과의 충돌·경합 가능성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한정된 자치입법역량의 낭비 및 규범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특례 설계는 지양하여야 할 것임

## 5. 뉴스브리핑

출처

### ■ 7월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보탬이(e)' 활용해 지방보조금 투명하게 관리 (내용 요약)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이(e)' 7월부터 시·군·구 등 전국 지자체로 확대 개통
- 자동화 시스템으로 부정수급 예방하여 투명하게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새롭게 구축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이(e)'를 7월 3일(월)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개통한다.

'보탬이(e)'는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되던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를 전자화·자동화한 시스템이다. '보탬이(e)'는 단계별 개통 계획에 따라 지난해 1단계로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에 활용되었으며, 올해부터는 2단계 시행으로 1월부터 시·도에서 우선 운영되고 있다.

7월부터 시·군·구에서도 '보탬이(e)'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 보조금이 중복으로 지급되거나 부정 수급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보조금을 시스템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 생활인구 최초 산정 (내용 요약)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 통근·통학·관광 등 체류 유형별 대표 지역 선정하여 시범 산정
- 올해 시범 산정 결과를 분석·보완하여, 내년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정책 추진, 민간 주도의 신산업 육성에 활용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7개 시·군에서 올해 최초로 산정된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로써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여건, 체류 목적,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으로 7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시·군은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경남 거창군이다. 체류 유형별로 구분하면 통근 2개, 통학 1개, 관광 2개, 기타 2개 지역이다. 행정안전부는 통계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하여 올해 연말까지 7개 시·군의 성별·연령·체류일수 등 다양한 유형별로 생활인구를 산정하여 최종 공표할 계획이다.

## 5. 뉴스브리핑

출처

### ■ 향후 3년간 지역 경제교육을 주도할 17개 시·도별 지역경제교육센터 모집 (내용요약)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지역 경제교육 거점(허브)강화 추진

기획재정부는 '24~'26년 경제교육사업을 수행할 시·도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고자 공모를 실시한다. 지역경제교육센터는 경제교육지원법을 근거로 초·중·고 학생, 지역 소외계층(지역아동센터, 다문화, 노인, 군장병 등) 등 대상 경제 교육을 중점 수행하고, 지역 내 지자체, 교육청 등 경제교육기관 간 협업을 주도하는 지역 경제교육의 허브이다.('21년 19만명, '22년 22만명 교육 진행)

이번 지역경제교육센터 공모는 기존 센터의 지정 유효기간이 '23.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 공모기간은 7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40일이다. 공고문은 7월 27일 09시부터 기획재정부 및 '경제배움e'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후 심사위원회를 통해 응모기관의 전문성, 경제교육사업 수행 능력 및 거점 가능성,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1월경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 추가 개시 (내용요약) [바로가기](#)

산업통상자원부

- '식품매장 냉장고 문 달기 지원 사업' 8.7일부터 접수 시작

- '노후 냉난방기 교체지원 사업' 시행 15일 만에 접수 4,150건 돌파

정부는 소상공인의 에너지 절감과 냉방비 등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식품매장 냉장고 문 달기 지원 사업' 공고문을 8. 4.(금) 한국전력공사 사이버 지점\*에 게시하고 8. 7.(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작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본격 확대하는 것으로, 올해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1만 대의 냉장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시범사업에서는 사업 전후로 전력 사용량이 평균 51.5%(여름철 최대 60.6%) 절감되고 연간 전기요금은 문(이하 "Door") 1㎡당 약 224천 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지원대상은 기존에 식품매장에서 사용 중이던 개방형 냉장고를 단열성, 안전성, 시인성 등 정부가 정한 일정 성능을 확보한 문(Door)형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 당 259천 원(필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그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던 에너지 손실요인을 제거하고 냉방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지속해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에너지효율 개선에 있어 고민하고 계신 부분을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